

탄소중립도시 향한 발걸음 시작한 도시들

대전시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2021. 1. 21.

전라남도 산림보전과
2021. 1. 26.

대전시, 2050 탄소중립도시 비전 선포

대전시가 '삶이 건강한 산소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의지를 선포하였다. 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감축과 2050년 순(純)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건물 ▲수송 ▲에너지 ▲시민협력의 온실가스 감축 4개 부문과 탄소흡수원인 도시숲 조성 1개 부문으로 구성된 '4+1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노후영구임대아파트(3,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 녹색건축물 전환을 선도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수송 부문은 올해 친환경버스(53대)와 전기택시(142대) 보급을 시작으로 전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공유자전거 확대 등 대중교통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1만 호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더불어 올해 기후변화대응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전형 탄소제로 시민운동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흡수원인 도시숲을 1,000개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자녀안심그린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하며 생활공간 주변 자투리 땅을 활용한 생활공간 속 녹지도 확충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산림 외 지역에 숲 확대를 통한 탄소제로화 시도

전라남도는 2050년 탄소제로화를 위해 산림 외 지역에 대규모 숲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2018년부터 해마다 1,000만 그루(3,000ha) 이상의 나무를 식재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산림탄소 상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에는 순천만국가정원의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산림이 아닌 지역에 산림을 조성하고, 감축된 탄소량을 정부의 검증을 거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는 순천만국가정원 외에 신안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지(100ha)와 해남 솔라시도 해안방재림(10ha)의 외부사업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도내 대규모 도시숲에 대해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승인과 한국거래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감축한 온실가스의 양을 1만 8,000톤*으로 인정받아 4억 3,000만 원의 배출권 거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단체 참여숲(399곳), 섬숲 생태복원 사업(3,440ha), 생활권 숲 등 유휴 토지에 신규 산림을 확대 조성해 경관 향상은 물론 탄소 저장량을 높여 탄소제로화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 2020년 기준